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축소 방침 철회

8개 기관→4개 기관 추진
시의회·시민단체 강력 반발
추석연휴 이전 도시공사 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대북특사로 파견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5인의 특사단과 외교·국방·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종전대로 도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광주시가 마련한 기존 인사청문회 대상 8개 기관을 4개로 축소하는 방안이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8곳에서 4곳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줄이려고 했으나 반발이 잇따라 축소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광주시는 청문 대상기관이 너무 많고 제출서류도 복잡한 데다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인해 유능한 전문가들이 지원을 꺼린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청문 축소를 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논평을 내고 "광주시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축소는 시대의 흐름의 역행이자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시의회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 뒤 광주시의 인사청문회 축소 요청에 반대했다.

앞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민선 6기인 지난 2015년 2월, 협약을 통해 8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4대 공기업과 복지재단, 문화재단, 여성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4개 출자출연기관이 청문 대상이다. 전남도와 공동으로 청문하는 광주전남연구원까지 합하면 9개 기관이다.

이에 광주시는 2015년 5차례, 2016년 3차례, 2017년 5차례 등 모두 13차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8명을 임명했다. 2명은 지명철회, 또 다른 2명은 자진 사퇴했다. 2015년에 3명, 2017년에 1명이 낙마했다.

민선7기 첫 청문회는 도시공사 사장이 대상으로, 추석 연휴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3일 복수의 후보자가 추천되면 시장이 최종 후보자 1인을 지목하게 되며, 청문회는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최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김익주·김점기·반재신·송형일·정무장·정순애·황원택 의원 등 7명이 청문위원으로 나서게 된다.

추석 직후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차기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연휴 직후인 28일 복수의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내년에는 3월에 복지재단 대표이사, 6월에 환경공단 이사장이 임기만료여서 각각 늦어도 2월과 5월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2020년에는 신용보증재단이 4월, 도시철도공사가 5월, 여성재단이 6월, 문화재단이 9월에 각각 기관장 임기가 끝나 임기만료일 한 달 이내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임

기를 채우지 못하면 신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앞당겨질 수 있어 주목된다.

또한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 "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논란을 빚기도 해 향후 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기관장 물갈이"를 통해 낙산인사를 강행하던 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 등 11개 시·도가 현재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고 부산과 경남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요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남북관계 발전 통해 비핵화 견인”

청와대 대북 특사단 점검 회의 방북 목적 등 밝혀

청와대가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남북 정상 간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이를 동력으로 삼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북미 간 견제치를 좁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북 특사단을 이끄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북을 하루 앞둔 4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평양 방문의 목적을 밝혔다. 남북정상회담의 구체 일정과 의제 논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이루기로 했던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데 필요한 논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 등 세 가지다.

이들 목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정상 간 신뢰증진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판문점선언의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모두 남북 정상 간 신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 정상 간 신뢰는 바뀌 말하면 문 대통령의 '중재역'에 대한 검증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 남북정상회담 일정의 확정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

이나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지부진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징적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과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먼저 요구한다는 미국은 현재 각자의 태도를 고수하며 맞서 있다.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어렵게 방향 잡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물줄기가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문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이 한 번 더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특사단이 들고갈 문 대통령의 진심이 어떤 내용인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 비핵화에 쏠린 상황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시발점이 될 비핵화의 당위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구체적인 비핵화와 종전선언 로드맵의 윤곽을 담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일 때도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해왔다고 밝힌 만큼 북한과 미국 모두 상당 부분 수용 가능한 원칙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검증·관리 대폭 강화...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행안부 인사운영 기준 개정

합격배수 공개하고 성비 기록

외부전문가 참여 절반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013~2017년 지방공기업에서 실시한 채용과정을 점검한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비리가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를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www.cleaneye.go.kr) 시스템에 지방

공기업의 채용공고문만 올라온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외 출자·출연기관의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뀔 때는 기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 공고도 해야 한다. 채용정보 유형별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인다.

채용단계별로 공통기준도 제시했다. 합격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류전형에서는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격처리하도록 하고 면접시

험은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지방공기업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직원이 임의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고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감점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옛, 밝은광주인과

스마일라식은 역시 신세계안과

- 2013년 호남최초 3D스마일라식 도입
- 3D스마일라식 17,000례 달성 (2018년 8월 기준)
- 스마일라식 'Best skilled 닥터' 선정(전국 5인)
- 전국 4대 스마일센터
- 호남유일 3D스마일장비 2대 보유
- 소비자만족지수 안과부분 3년 연속 1위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시력교정 대상 수상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